

I. 개 요

1. 일시 : 2015. 5. 26. (10:30~12:30)

2. 장소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회의실

3. 발표자 :

박순철(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위원)

김래현(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)

4. 참석자

천유진(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)

정지원(KIEP 개발협력팀 연구위원)

송지혜(KIEP 개발협력팀 연구원)

5. 주제

- “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REDD+ 가능성 및 전망”

발제 1)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

발제 2) 유엔기후변화협약 산림분야 - 논의 동향 및 주요 이슈

II. 주요 발표내용 (상세 내용 별첨 참조)

(1) 발제 1: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

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순철 전문위원

□ (개요)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서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내 노력만으로 달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, 비용효과적인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 교토메커니즘 도입

- 공동이행제도(JI: Joint Implementation), 청정개발체제(CDM: Clean Development Mechanism)와 배출권거래제(ET: Emission Trading)

- 청정개발체제(CDM) 등록 현황 및 CER배출권 현황을 볼 때, 국제탄소시장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.

-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과 선진국의 의무준수 비용 경감을 동시에 추진

□ (협상논의 경과) COP13-19에 걸쳐 신규 시장 메커니즘, 다양한 접근법 및 비시장 접근법에 대해 세분화하여 논의를 진행함.

- COP18: SBSTA에 3개 의제(신규시장 메커니즘, 다양한 접근법, 비시장 메커니즘)에 대한 작업계획 운영 지시

- COP19: 신규 시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(선진국)과 비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(개도국) 대립으로 추가 협의 없이 종료됨.

- COP20: SBSTA 하에서 기술 이슈 논의(선진국) vs. ADP 하에서 논의(개도국) 대립;

o 우리나라는 신규 시장 메커니즘인 Credited NAMA Mechanism(C-NAMA) 제안하여 중재적 포지션을 유지

□ (C-NAMA)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은 C-NAMA는

협약하의 감축공약 달성을 위해 당사국의 자발적인 NAMA 활동에 국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의미

- C-NAMA 설계 구성요소를 합의문에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인센티브 제공 및 비용효과적 활용 추구

(2) 발제 2: 유엔기후변화협약 산림분야 - 논의 동향 및 주요 이슈

국립산림과학원 김래현 박사

□ (산림관련 UNFCCC 논의) LULUCF(Land Use, Land Use Change and Forestry) → A/R CDM(신규/제조업 청정개발체제) → REDD+으로 발전

□ (REDD+ 자원 논의 동향) SCF(재정상설위원회)는 성과기반접근법(result-based)과 다양한 접근법(alternative approach)을 활용하여 산림에 대한 회원국 및 기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함.

- 산림분야 파이낸스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간 조화 및 조율 추진
- 브라질의 산림전용 감소와 오존층 파괴 속도 둔화를 통해 REDD+ 관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됨.

□ (COP21 예상 쟁점) 토지부문의 관점과 전체 협상의 관점에서 갈등 예상됨.

- 토지(산림)부문에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'공통된' 규칙 설정 요구에 대해 논의 예정
- 협상 전반적으로는 공약의 확실성 및 파리 당사국총회 이전에 목표 설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규칙의 호환성 도출이 우선과제임.

III. 주요 논의사항

□ (신규 시장 메커니즘 논의) 최근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신규 시장 메커니즘과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

- 신규시장메커니즘: 감축규모 확대/교토메커니즘과 상호보완적 관계
- 다양한 접근법: 감축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장메커니즘(신규 시장 메커니즘, 기타 시장 메커니즘, 비시장 접근법) 연결

□ (우리나라 REDD+ 추구 목적) 우리나라는 REDD+를 통해 1억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자 계획했으나, 현실성을 고려하여 3천만 톤으로 축소한 바 있음.

- 시장에서의 탄소크레딧 활용 계획이 어려워짐에 따라 VCS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우회하였음.
- REDD+는 국가감축목표에 활용됨이 바람직함.
 - o 일본의 경우 ①에너지효율 제품을 활용한 탄소감축, ②REDD+ 활용한 탄소감축으로 JCM의 방향성을 설정한 바 있음.
- 우리나라의 경우 REDD+ 등 산림분야를 활용한 탄소감축 방안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다분함.
 - o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한 감축공약 이행방안(가칭 KCM)을 논의 중에 있음.

□ (신기후체제 대응 REDD+) 과거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신기후체제에서는 개도국도 함께 의무를 부담함.

- 자발적 시장 보다는 국가감축목표, 즉 감축기여도가 보다 중해짐.
- 다양한 접근법 중 하나로 REDD+ 개발 가능

□ **(REDD+ 자원 출처)**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REDD+ 활동은 ODA 재원을 활용함이 가장 바람직함.

- REDD+ 1, 2단계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고, 3단계는 공적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금을 활용한다는 접근법이 가장 보편적임.
- 공적자금으로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며, 해당 수원국에서 활동 중인 선진공여국과도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야 3단계(REDD+ 추진 통한 인센티브 제공)에도 참여가 가능함.
- 일찍이 개도국의 REDD+에 참여해 온 선진국들은 REDD+ 활동 추진을 통한 탄소크레딧 인정을 추구할 것임에 우리나라 또한 대응이 필요함.

□ **(SDGs와 개발자원)** 2015년 이후 국제사회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할 예정임.

-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ODA 약 30% + 기타공적기여(other official flow) 약 70%인 것으로 예측됨.
- 따라서 향후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ODA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와 OOF(Other Official Flows) 등 모든 자원유형을 포함하는 TOSD(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) 개념이 활용될 것임.
 - o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TOSD를 측정/계산하는 새로운 방안을 개발 중임.
- 이처럼 개발을 위한 수단의 확대는 기존 ODA가 빈곤퇴치를 목표로 삼았던 데에 비교하여, 개발이 포괄하는 범위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시사함.
- 따라서 기후변화 협상에서도 ODA vs. 기후재원의 논의는 점차 감

소할 것이며, 반면 재원의 출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.

-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TOSD가 즉 ODA라는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, TOSD 측정이 본격화 될 때의 대응방안이 미흡함.
- 기후자원 뿐만 아니라 개발자원 확대의 측면에서도 REDD+를 활용한 ODA 및 기타 자원출처 확보는 많은 가능성을 지님.

/끝/